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 심포지엄

동학농민혁명^과

농업·농촌 및

생명·생태 살리기



일시 | 2006년 12월 9일 토요일 2시

장소 | 국립공주박물관 강당

주관 | 폐정개혁안 및 우금티선언 실행위원회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 심포지엄

동학농민혁명^과

농업 · 농촌 ^및

생명 · 생태 살리기

일시 | 2006년 12월 9일 토요일 2시

장소 | 국립공주박물관 강당

주관 | 폐정개혁안 및 우금티선언 실행위원회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식 순

○ 사 회 : 서동진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무국장

○ 주제발표 (14:00~15:00)

<발표 1>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방향 (20')

지수걸 /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발표 2> 동학농민혁명과 농업·농촌 살리기 (20')

윤병선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발표 3> 「2006 폐정개혁안」 및 「2006 우금티선언」에 대한 해설 (20')

권영근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종합토론 (15:10~16:30) : 10개 분야

-어 린 이 : 양은희 / 생태유아공동체 상무

-여성농민 : 신문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종자부문 : 정종진 / 정농회 이사

-시민사회 : 윤호창 / 서울YMCA 간사

-생활협동조합 : 정원각 / 한국생협연구소 사무국장

-환경운동 : 정 호 /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생산부문 : 오상근 / 청주한살림 상무

-로컬푸드 : 김병혁 / 대구경북농업희생과지역자치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현장농민 : 이효신 / 정읍농민회

-생명·생태 : 수지행 / 생명평화결사 사무국장

목 차

[발표 1]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방향 / 1
지 수 결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발표 2]

동학농민혁명과 농업·농촌 살리기 / 17
윤 병 선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발표 3]

「2006 폐정개혁안」 및 「2006 우금티선언」에 대한 해설 / 24
권 영 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발표 3]은 별도의 자료집 『2006 우금티선언 및 폐정개혁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1] 어린이

양 은 희 (생태유아공동체 상무) / 25

[토론 2] 여성농민

신 문 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26

[토론 3] 종자

정 종 진 (정농회 이사) / 27

[토론 4] 시민사회

윤 호 창 (서울YMCA 간사) / 28

[토론 5] 생활협동조합

정 원 각 (한국생협연구소 사무국장) / 29

[토론 6] 환경운동

정 호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 36

[토론 7] 생산부문

오 상 근 (청주한살림 상무) / 37

[토론 8] 로컬푸드

김 병 혁 (대구경북 농업회생과지역자치를위한사회연대 사
무국장) / 38

[토론 9] 현장농민

이 효 신 (정읍농민회 농민) / 39

[토론 10] 생명·생태

수 지 행 (생명평화결사 사무국장) / 40

발 표 1

지 수 결 /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방향

1.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 것인가?

‘(사단법인) 동학농민전쟁 우금티기념사업회(이사장 조동길)’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사장 이이화)’은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공주 우금티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식 및 2006 우금티 예술제’를 개최한다. 주최 측이 강조하고 있는 행사 목적은, 첫째,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널리 알리,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참여층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 둘째, 기념사업의 참여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농민·농촌·농업 살리기’, 더 나아가서는 ‘지역·생태환경 살리기’ 운동에 관심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을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 셋째, 참여 단체들과 함께, ‘농민·농촌·농업 살리기’나 ‘지역·생태환경 살리기’, 특히 현안 문제인 FTA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기념행사를 조직한다는 것 등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 주체들이 마련한 최대의 이벤트는 역시 <2006 우금티 선언> 및 <2006 폐정개혁안> 발표 행사이다. 위 행사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는 여러 시민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우금티 선언>과 <폐정개혁안>을 작성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선언>에는 ‘농업·농촌 살리기’, ‘지역 살리기’, ‘생태환경 살리기’ 운동의 역사적 뿌리(역사적 자산, 역사적 상상력의 원천)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개혁안>에는 현안문제와 관련한 실현 가능한 대안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필자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부터 지금까지 우금티사업회 회원으로서,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싸움과 더불어 매년 11월 11일(음력으로 우금티 전투 마지막 날) 어간에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기념행사를 주관해 왔다. 물론 성과도 많았다. 우금티를 국가사적지(제387호)화 한 것, 일제가 신작로(공주·부여간 국도)를 만들면서 훼손한 고개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 터널을 만든 뒤 다시 복원하기로 한 것 등도 모두 다 우금티사업회의 고군분투 덕분이었다. 하지만 매년 기념행사를 치를 때마다, 행사 자체가 ‘의례화’되고 또 참여자들도 점차 줄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고민해보곤 했다. 특별히 2004년 2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특별법 통과를 빌미로 공주시는 국비를 뜯어내, ‘그들 방식대로’, ‘우금티 사

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 틀림없는데, 그 결과는 정읍시의 '황토현 전적지 조성사업'처럼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해를 무릅쓰고 감히 말한다면, 정읍시가 수백억원의 국비를 들여 조성한 우람한 건축물과 조형물들은 교육시설로서의 의미는 물론이고 추모시설(공간)이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의미조차도 거의 없는 그저 흉물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금티 기념행사가 뭐 그리 어려울 것이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우금티는 반외세 반봉건 투쟁과정에서 수많은 농민군이 산화한(혹은 억울하게 희생된 곳)이니,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적절한 내용과 형식의 추모행사나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전북 정읍시의 경우는 황토현 기념행사를 시 차원의 공식적인 축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고속도로 휴게소 이름까지 '녹두장군'이라 병칭할 정도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의 사적지를 돌아볼 때마다 필자는,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진지한 사유'가 지나치게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 것인가? 어찌보면 올해 행사에서 새롭게 시도하고자 한 <우금티 선언>과 <2006 폐정개혁안> 발표 행사는 이런 고민의 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올해 행사의 취지와 의도를 좀 더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양상과 역사적 의미를 간단히 정리한 뒤, 기념사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필자 나름의 소회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양상

조선왕조 사회를 지탱해주던 양대 기둥은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토지제도였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가속화된 사회변동 과정에서 조선왕조 사회의 양대 기둥은 뿌리째 그 기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낡은 사회의 지지자였던 양반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패배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부패 무능한 지배세력은 체제유지를 위해 조선후기 사회변동 과정에서 성장한 새로운 사회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을 개량적인 사회정책이나 무력으로 억누르면서 세도정치를 감행하였으며, 지방 관료들은 목민관으로서의 사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에 따라 국가기강이 문란해지자, 자연재해도 덩달아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인구 1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 3~4년에 한번 꼴로 수십만의 기민이 발생하는 가뭄이 닥쳤으며, 괴질(怪疾), 콜레라(輪疾), 장티푸스(染病), 천연두(痘疾)와 같은 전염병이 2, 3년에 한번 꼴로 전국을 휩쓸었다. 1821년부터 22년 사이에는 콜레라(輪疾)가 전국을 휩쓸어 수십만명이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한 세대가 지난 뒤에도 “조선 사람들은 그때 이야기만 해도 벌벌 떨 정도”였다. 요즘도 애용되는 “염병할 놈”이라는 욕은 이렇듯이 예사스런 욕이 아니었다. 경상도 땅 어느 고을의 죽소(粥所)에서 줄을 서있다 자기 남편이 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례를 기다려 자기 몫의 죽을 허겁지겁 다 먹은 연후에야 비로소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어느 부인네의 이야기, 아이를 출산한 후 굶주림에 눈이 뒤집혀 자기 자식을 삶아먹었다는 연산(連山) 사노비(私奴婢) 순례 이야기, 어린 새끼 몫으로 군포(軍布)를 물린데 항의하여 자신의 양물을 식칼로 잘라낸 뒤 “이 물건 때문에 이 같은 곤액을 당하는 구나” 하면서 통곡했다는 전라도 강진 땅 어떤 농부의 이야기, 그야말로 막가는 세상이었다. 당시는 살맛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사람노릇’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던 민중들은, 관리나 지주들에게 읍소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개기거나 영겨보기도 했으나, 이 또한 별무신통이었다. 결국은 ‘죽기 살기’로 막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하늘과 땅을 땀똥처럼 척 붙여놓고 한번 갈아버리고 싶은 심정”, 신동엽시인은 당시 민중들의 반사회적 심성을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민중들 사이에는,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나, 난리나 났으면 좋겠네,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남아 나겠나”(『사발통문』) 하는 식의 ‘말세(末世)의식’과 ‘난리(亂離)의식’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지배 권력의 부패와 무능에 저항하는 피역(避役), 패서(掛書), 산호(山呼), 상소투쟁(上訴鬪爭), 그리고 관서농민전쟁(1812)이나 임술민란(1862) 등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농민봉기였다. 제세(濟世)의 성인(聖人)이신 ‘정진인(鄭眞人)’이 어떤 섬에서 출현했다거나, 운수(運數)에 따라 천지개벽(天地開闢)이 시작되었다거나, 후천선경(後天仙境) 건설을 위한 천지공사(天地公事)가 임박했다는 풍설들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바로 하늘(人乃天, 事人如天)이라는 선동, ‘천지개벽의 운수가 도래했다’라는 선동 등에 감동하고 흥분하지 않을 민중은 당시 조선 팔도에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난리굿’만으로 세상을 뒤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1862년 임술년에는 70여개 이상의 군현에서 극렬한 농민봉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뒤바뀌지 않았다. 봉건지배세력은 ‘천하위공(天下爲公)’보다는 세도정치를 강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목민관들은 정약용선생이 강조한 율기(律己)와 봉공(奉公)과 애민(愛民)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보다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더 혈안이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개항 이후 불평등 무역체제가 심화되면서, 일부의 부패 관료나 매판상인들은 돈을 삼태기로 주워 담는 횡재를 하기도 했으나, 대다수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다. 당시 한반도는 아귀(餓鬼)와 채귀(債鬼)와 권귀(權鬼), 왜귀(倭鬼)와 양귀(洋鬼)와 청귀(淸鬼)가 날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물론 민족적 위기에 대응한 봉건 지배세력 나름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의 개화 관료들은 ‘변법(變法)’과 ‘경장(更張)’을 말하며 부국강병 식산흥업을 서두르고, 또 일부의 관료나 선비들은 위정척사의 뜻을 담은 상소를 올리거나 의병을 일으켜 민족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의 척사운동은 반봉건 없는 반외세운동이고, 반면에 개화운동은 반외세 없는 반봉건운동일 뿐이었다. 게다가 대다수의 양반관료들은 매관매직(賣官賣職), 가렴주구(茹斂誅求) 등 벼슬 받을 일구는데 열을 올릴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선왕조 5백년을 이어온 민본(民本)의 정치문화 전통은 비운 뒤 소동 퍼지듯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매천 황현 선생은, “참으로 선비노릇하기가 어렵구나(難作人間識字人)” 탄식하며 음독자살을 결행했으며, 당대의 거유(巨儒)였던 간재(艮齋) 전우(田愚) 선생은 거병(擧兵)해야 한다는 제안을 물리친 채 계화도(界火島)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파듯 결국 민중들이 스스로 나서는 수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혁명이었다. 1892년 말부터 본격화된 교조신원운동(동학 합법화운동), 1894년 1월의 고부농민봉기, 같은 해 3월부터의 제1차 농민전쟁, 같은 해 5월 전주화약의 체결과 더불어 본격화된 집강소활동, 그리고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더불어 불붙은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제2차 농민전쟁, 갑오년 농민군 의로운 싸움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단순했다. 탐관오리 및 불량 양반 엄징, 노비문서 소각 및 천인의 대우 개선, 청상과부 개가, 무명잡세 폐지, 공사부채

의 무효화, 토지 평균분작 등의 구호는 일반 농민들의 생활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제2차 농민전쟁 시기에는, 도(道)는 다르더라도 왜놈을 물리치자는 뜻은 같을 터이니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으나, 대부분의 양반관료와 유생들은 이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최후 결전인 우금티 전투는 11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벌어졌다. 당시 농민군은 공주 주변 야산의 날등에 진을 치고 용감무쌍한 돌격전을 수 없이 감행하였으나, 회선포(카틀링식 기관총)까지 동원한 일본군의 화력 앞에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일본군과 관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궁궁을을(弓弓乙乙)’을 새긴 부적도,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하는 주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우금티 전투를 고비로 농민군 주력은 노성, 논산, 전주, 원평, 태인 등지를 거치면서 패주에 패주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한 길이 무슨 허물”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런 항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물론 동학농민군들은 신동엽 시인의 노래처럼 잠시일망정, “력사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짱을 찢고 영원(永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농민군이 공주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양 입성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며, 또 농민들의 꿈도 쉽게 이루어질 리가 만무했다. 왜냐하면 당시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민중들은 그저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소리죽여 부르며, 또 다시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 새벽이 깜깜한 어둠을 던고 오듯, 자주·평등·대동세상을 향한 갑오년의 힘찬 진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비록 민중이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갑오년 농민들의 당찬 함성은, 민중 주체의 민족해방운동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여운 긴 쇠 나팔 소리였다.

3.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

현실 정치투쟁의 측면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음이 분명하다. 국사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연구 성과들은 동학농민군의 주장이 갑오을미개혁에 일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실상 갑오을미개혁은 자주적 개혁도, 농민군이 꿈꾸었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도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투쟁이 아닌 역사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결코 실패한 혁명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은,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이나 민족민중운동의 전개과정에서도 여실히 확인 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패배

와 죽음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 민족민중운동의 역사 과정에서 그 밑거름이자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각종 민중문학작품이나 노래에 우금티와 황토현, 녹두꽃과 죽창 등의 상징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적 상상력의 보고이자 자양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반증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교훈은, “역사발전의 주체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당시 국가나 관료들은 모두 다 자기 이익과 영달을 위해 허둥댔음에 반해, 국가나 사회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던 민중들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 보국안민과 척양척왜를 외치고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사실은 “역사발전의 주체는 늘 일하는 사람들 이었다”는 ‘선언적 명제’가 결코 말뿐만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국가나 사회로부터 특권을 많이 부여받은 자들이 더 애국 애족적이어야 옳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식민지화와 더불어 일부의 관료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으며, 불평등 무역의 확대과정에서 돈을 삼태기로 주워 담았던 관료와 지주와 상인들은 일본의 조선 진출을 은근히 반겼다. 이들에게 ‘한일합방’은 어느 소설의 제목처럼 ‘태평천하’의 시작에 다름이 아니었다.

그러면, 민중들은 왜 그토록 애국 애족적이었을까? “본질과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란 특정사회의 지배계급이 자신의 계급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배타적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공적 형태의 정치적 권력기구이다”, 물론 이런 견지에서 보면, 민중들이 현실 국가에 애정을 가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해야 옳다. 게다가 ‘막가는 사람’(막가파?)들이 흔히 하는 반(反)사회적인 행동들을 익히 목도한 사람들의 경우, 이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현상일수도 있다. 그러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세뇌나 민중들의 허위의식 때문이었을까? 그도 저도 아니면 민중들의 타고난 애국심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의지가 할 데 없는 민중들의 경우, 어찌되었든지 ‘비벼 볼 언덕’은 ‘민본(民本)’과 ‘민생(民生)’을 표방하던 국가 밖에 없었을 것이란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을 이야기할 때, 국가에 대한 환상이나 배타적 민족감정, 또는 흑자들처럼 ‘조악한 지적 포폴리즘’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열정 앞에 스스로 겸손해져야 한다는 지적은 이런 대목에서도 빛을 발한다.

수많은 역사가들이 실증했듯이, 실제 역사를 봐도 세상을 변화시킨 이들은 늘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는, 민중들이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잘 알았기 때문도, 또 유식했기 때문도 결코 아니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시대 모순의 직접적인 체현자이자 담지자였기 때문이다. 먼저,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니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동학농민군들은 시대모순의 담지자이자 체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절박함 때문에 함께 모여 동학이나 농민혁명이라는 위대한 사상과 실천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는 말, 아니 “민중들이 원하는 세상은 민중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일터와 삶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데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교훈은, 난리를 피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가려면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는 것, 원민(怨民)이나 난민(亂民)이 없게 하려면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연구서들은, ‘난리’라는 말은 ‘관변 측의 호명’이므로 1894년의 봉기를 그렇게 호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이른바 ‘동학 외피론’)라고 말해 왔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도 1894년의 사건을 ‘동학농민운동’이라 호명하고 있다. 하지만 난리라는 말은 단순히 권력의 언어만은 아니었다. 당시에 작성된 「사발통문」에도 보이듯이, “매일 난리나 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민중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말하되, 낮네 낮서 난리가 낮서, 에이 참 잘 되얏지 기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나겠나 하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진짜로 난리가 난 것이었다. 하지만 난리의 현실적 정치적 결과는 모두에게 참담한 것이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난리’나 ‘반사회적인 투쟁’은 늘 모두에게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돈도 뺏도 없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난리는 무조건 피하고 볼 일이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작난(作亂)질은 치는 사람이건 작난을 치게 만든 사람이건, 난리는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말썽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저항은 상생(相生)도 해원(解冤)도 아닌,

누구 말대로 ‘죽음의 곳판’일 뿐이다. 그래서 작난 질이나 막가는 투쟁을 선동하는 행위는 위험하다. 하지만 우금티 마루 위의 민중들은 결코 죽음의 곳판도 마다하지 않는 ‘막가파’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을 만들려면, 상생과 해원의 뜻을 담은 나누는 문화, 달리 말하면 밥 한 그릇에 만고의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그것도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을 통해 이미 몸으로 알고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다.

교과서나 관련 연구 성과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근대 지향의 반외세 반봉건 운동’이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학농민혁명이 반외세와 반봉건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꿈과 희망은 섭알턴적 사유를 빌지 않더라도, ‘근대 지향도, 미화’도, ‘근대 극복도 비판’도 아니었다. 엄밀히 말하면, 동학은 당시의 민중들이 자신의 언어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한 일종의 예언이자 묵시록이었다. 탈 근대론이 횡횡하는 오늘날까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이 빛을 발하고 있는 까닭은 다 이런데 있다 할 수 있다. 요즘 생태환경운동을 하는 이들이 이천식천(以天食天)이나 물오동포론(物吾同胞論)을 새삼스럽게 주목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연유 때문이라 믿어진다.

4.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과 방법

충남 공주시에는 누구의 표현대로,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을 판 같이 하는 대회전’, 아니 “19세기말 조선 땅에서 세계사 아니 전우주사적인 패러다임 쉬프트가 진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벌어진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격전지, 우금티가 있다. 1994년 농민전쟁 100주년 때 일부 뜻있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우금티는 국가사적지(387호)가 되었으나, 그곳에는 아직도 주차장은 물론이고 화장실조차 없다. 현재 우금티에는 1973년 천도교측(敎領 崔德新)이 박정희에게 ‘품신(稟申)’, ‘양청(仰請)’하여 ‘명예회장’과 ‘제자(題字)의 휘호(揮毫)’를 얻어 설립한 ‘동학혁명군 위령탑’, 그리고 공주지역 시민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우금티사업회’가 뜻을 모아 조성한 몇몇 조형물(목비와 장승, 흙담과 돌담, 그리고 봉화대)만이 서 있을 뿐이다. 그동안 우금티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고개 자체가 없어질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몇 년 전에는 공주시내의 한 대형교회가 우금티 말랭이에 ‘가든(?)’ 교회를 지으려 했던 적도 있었다. 만약 그때 우금티 마루에 교회

가 들어섰더라면, 그곳에서는 ‘소리 없는 통곡’이 아니라 붉은 십자가 밑의 ‘찬송과 기도’가 연일 울려 퍼졌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주시의 도로확장 공사는 위기의 결정판이었다. 당초 공주시는 4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우금티 자체를 모조리 뭉개 버리려 했으나, 우금티사업회의 반대노력 덕분에 터널을 만들고 터널 윗부분은 농민혁명 당시대로 고개(길)를 복원하는 쪽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우금티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과 동학농민군들의 뜻을 제대로 기리는 사업은 별개일 수밖에 없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래 우금티사업회는 매년 예술제 형식으로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 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몇 년 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전북 도연맹과 함께 황토현에서 우금티까지 농가부채 탕감 등을 외치며 반트럭 시위를 전개해보기도 했으나, 그것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하여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우금티사업회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들은 점차 ‘운동성’을 상실한 채 ‘사업단체화’ 해가고 있다. 특히 특별법 8조는 기념사업의 대상과 범위로서, 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②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존, 관리, 전시 ③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복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 같은 경향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진다.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 것인가? 흔히 말하듯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역사화’(기억의 제도화, 공식화)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통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도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역사화’하는 사업,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화해야 할 것인가?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역사화하고 기념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은, “역사적 진실이란 고정불변한 그 무엇이 아니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일 것이다. 위 말은 달리 보면, ‘만고의 진리’란 없으며, ‘피땀 흘려 애써 만들어낸 진리’만이 진정한 감동이자 교훈일 수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역사화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이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동학농민혁명사상(史像)’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 또는 기존의 ‘동학농민혁명사상(史像)’이 대중적인 설득력이나 감동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지적, 박제화·신화화, 특권화·법률화된 ‘동학농민전쟁사상’을

불식해야한다는 주장 등은 그래서 늘 정당하다. 그러면, 기존의 낡고 특권화 된 역사상을 극복하면서, 민중들의 현재적 ‘꿈과 희망’을 담은 새로운 ‘동학농민전쟁 사상’을 만들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동학농민전쟁 기념 사업은 단순한 위령(현창)사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역사 만들기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나 교훈에 비추어볼 때, 기념사업은 단순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중투쟁의 역사적 상징이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 이후 국가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가운데서 기념사업이 진행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이른바 ‘내셔널 히스토리’(국가민족사) 속에 포섭해 들이려는 기도가 눈에 띄게 두드러져 보인다. 기우일지는 모르나, 기념사업 주체들이 참여 층의 폭을 넓혀 나가려는 각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 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도, 결국은 ‘광주 국립묘지’나 ‘황토현 유적지’처럼, 또 하나의 구태의연한 ‘국방 유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진다.

‘역사 만들기 운동’이란 역사(언어적으로 재현된 과거)를 소재로 한 일종의 ‘의사소통운동’,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역사를 매개로 소통을 통해 공동의 꿈과 희망과 지향과 가치를 창조하는 운동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국가나 지식권력의 공식역사 속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다수 민중들의 기억을 해방시킴과 동시에 역사발전의 주체와 목표, 대상과 방법에 대한 수준 높은 상상력을 제고하는 의사소통운동이 되어야 마땅하다. 역사 만들기란 과거(실재)를 명명백백하게 재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를 진지하게 ‘사유’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응 그거, 민중 주체의 근대 지향, 반외세 반봉건이었지’ 하는 식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박제화 하는 순간, 기념사업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인간과 사회, 국가와 세계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고무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떤 고정된 진실, 특히 특정한 ‘교조(敎條)’를 강요하거나 세뇌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야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민중의 지성화’나 ‘역사 주체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두 번째는, “동학농민전쟁 기념사업은 그 자체가 기념(일)투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념(일)투쟁은 역

시 메이데이투쟁이다. 메이데이투쟁은 ‘오늘의 관점’ 또는 ‘민중의 관점’에서 왜곡되고 은폐되어온 민중투쟁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interpretation)’하고 ‘재현(representation)’하는 투쟁, 달리 말하면 새로운 ‘역사적 상징이나 전통’을 만들어가는 투쟁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제하나 해방공간에서 전개된 다양한 ‘기념(일)투쟁’은 과거와 현실을 대화시키는 ‘기억투쟁’이자, 과거의 역사를 전유하기 위한 일종의 ‘역사투쟁’에 다름 아니었다. 총독부 경찰이 이른바 「사상운동경계력(思想運動警戒曆)」을 만들어 기념(일)투쟁을 막아보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총독부 경찰 측의 자료에 따르면, 일제하의 민족해방운동 주체들이 중시했던 기념일은, ① 레닌 기념일(사망일, 1월 21일) ② 3·1 기념일 ③ 코민테른 창건기념일(3월 2일) ④ 조선공산당 창립 기념일(4월 17일) ⑤ 메이데이 ⑥ 6·10만세 기념일 ⑦ 반전(反戰)데이(8월 1일) ⑧ 국치(國恥) 기념일(8월 28일) ⑨ 소비에트혁명 기념일(11월 7일) 등 다양했다. 이런 날이 다가오면 운동 주체들은 기념집회나 시위, 대자보나 격문 배포투쟁은 물론이고 민속놀이나 각종 경연대회, 소인극(素人劇)이나 노래공연, 집단노동이나 헌금 등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혁명’이었으므로 기념사업은 당연히 민중사적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새로운 민중투쟁의 역사적 상징을 만들어가는 사업, 특히 살맛나는 세상을 향한, ‘민중투쟁의 역사적 상징이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역사 자산’일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념투쟁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농민·농촌살리기, 생태환경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이를 주도하고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운동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운동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운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는 자기들 스스로가 미래를 위한 ‘역사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역사적 사명의식)하는 것은 현실투쟁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쉽게 만들어 낼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자산이자 풍부한 민중적 상상력의 보고이다.

이런 점을 유념한다면, 정부가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한 것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6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며, “주관 부처는 농림부이며,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해 농업인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풍년 농사를 축하하고 농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왜 11월 11일 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은 없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혹자의 말대로 11월 11월을 한자로 쓰면 ‘土月 土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저 코미디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산화한 농민군들의 신통한 조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11월 11일은 음력으로 우금티전투(공주 대회전)의 마지막 날이었다. 우연도 보통 우연은 아닌 듯이 싶다. 역사기념일을 정할 때 그런 경우가 흔히 있듯이, 음력을 그냥 양력으로 치환하여 만약 11월 11일을 그대로 ‘농민의 날’로 받아들이자고 말한다면,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어찌되었든지 그 날의 의미는 달리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세 번째는, 동학농민혁명이나 우금티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농업·농민 살리기 운동, 지역·농촌 살리기 운동, 생태·환경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을 기념사업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두고 싶다. 왜냐하면 동학이나 동학농민혁명은 위와 같은 운동들의 역사적 씨앗이자 뿌리이자 밑거름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2006년 우금티 기념행사에 위와 같은 운동들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을 참여시키고자 한 것, 또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농업·농촌 살리기’, ‘지역 살리기’, ‘생태·환경 살리기’ 운동 단체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2006 우금티 선언>과 <2006 폐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오로지 이런 목적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선언>에는 동학농민혁명이 ‘농업·농촌 살리기’, ‘지역 살리기’, ‘생태·환경 살리기’ 운동의 역사적 뿌리(역사적 자산, 역사적 상상력의 원천)라는 사실을, 그리고 <개혁안>에는 현실 문제(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담아내고자 노력해 볼 작정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되게 하려면 기념사업은 당연히 공동체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는 방향,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의 역사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런 기념사

업이 되게 하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 애도하는 단순한 '위령의 제의(祭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동학농민군의 꿈과 희망, 그 패배와 죽음의 의미를 우리 모두 주체적으로 반추하는 행위, 달리 말하면, 역사 발전의 주체와 목표를 새롭게 반성하고 상상하는 새로운 '역사 만들기' 운동이자, '희망 찾기' 운동이 되어야 한다. 동학의 향아설위(向我設位)란 바로 이런 기념행위를 이르는 말일수도 있다. 이런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11월 11일은 메이데이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발 표 2

윤 병 선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동학농민혁명과
농업 · 농촌 살리기

1. 112년 전 이 무렵, 여기 우금티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왜 모였 던가를 엄숙한 마음으로 회상하여 본다.

“이 세상의 운수는 개벽의 운수라, 천지도 편안치 못하고, 산천초목도 편안치 못하고, 강물의 고기도 편안치 못하고, 나는 새, 기는 짐승도 다 편안치 못하리니, 유독 사람만이 따스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편안하게 도를 구하겠는가. 선천과 후천의 운이 서로 엇갈리어 이치와 기운이 서로 싸우는지라, 만물이 다 싸우니 어찌 사람의 싸움이 없겠느냐”(『해월신사법설』, 「개벽운수」)

“... / 하물며 우리 인간 / 대 물리는 일 얼마나 소중한가?... 자식 낳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노부모조차 모실 수 없는 세상,... 죽음 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던 농민들,... 농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무더기로 유민(流民)이 되면서,... / 다 같은 백성인데 / 이다지 불공평하니 /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 / ...그들은 모두 백성들의 힘으로 살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을 못살게 하는구나...” [애절양(哀絶陽)]

2. 오늘날 지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GATT-UR협상이 시작된 직후인 1987년, 가구당 평균 농가소득은 6,535,314원에서 WTO가 출범한 1995년에는 21,802,558원으로, 2002년 현재는 24,474,620원으로 엄청난 증가를 했음에도, 농가의 가구 수는 1975년 237만 9천 가구에서 2004년에 124만 4천 가구로, 농가인구는 1975년에 1,324만 4천여 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341만 5천여 명으로 모두 엄청나게 감소했는바, 유민이 되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한편, 식량이 엄청나게 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율은 1965년 93.9%에서 75년에는 73.1%, 82년에는 53%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대략 식량자급율이 25% 정도, 식용 곡물자급율이 50% 정도로 낮아졌다.

혼인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혼인을 꺼리고, 자식을 낳지 않아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학교는 3,265개가 폐교가 되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는 1992년에 1,960,478명이던 것이 2001년에는 667,148명으로 줄어들었다. 2000년 이후 매년 무료 양로원 설립은 90여개 씩 늘어나고 있고, 양로원 입소자도 매년 1200여명 씩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은 2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강북구에 비해 13배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서초구의 자살율은 9.68명인데 반해 강북구의 자살율은 1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80세 이상의 노인 자살율은 10만명 당 127명으로 평균 자살율의 무려 6배에 달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1997년 60.3조원에서 2005년에는 248조원으로 증대되었으며, 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끌어들이던 외국 투기자본들에 의한 국부의 유출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975년~2003년 사이 농촌지역 생태계 및 생명의 근거지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자.

농경지의 면적은 1975년 2,239,700ha에서 2003년 1,845,994ha로 17.6%인 393,706ha가 감소되었다. 농가인구는 1975년 1,500만여 명에서 2003년 490여만 명으로 이제는 장애인 인구나 신용불량자 인구보다도 더 적어져 완전한 소수자(Minority)로 전락하였다. 이는 운동의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산림의 면적 또한 6,635,352ha에서 6,411,893ha로 약 3.4%에 해당하는 223,459ha가 감소한 반면, 도시지역의 면적은 12,821.67km²에서 42,246.99km²로 230%나 증가되었다. 다목적댐 유역의 면적도 확대되어 5,050km²에서 314%에 해당하는 15,724.4km²가 증가한 20,774.4km²가 되었다. 그밖에 저수지 면적과 상수원 보호지역의 면적은 각각 384,413ha, 125,307km²가 확대되었다.

고속도로 등 전국 도로망의 유형별 총 연장 길이는 44,885.1km에서 96,037.1km로 114%인 51,152.0km이며, 산업공단 면적 267,477km², 농공단지 총 면적은 4,801ha이며, 생활폐기물 매립지의 면적은 1985년 65,212m²이던 것이 2003년에는 7,048,392m²로 107.1%나 확대되었다.

<표 1> 1998년~2003년의 골프장 현황

구 분	03년도	02년도	01년도	00년도	99년도	98년도
대상 골프장 수	179	163	161	149	137	120
총 면적(천ha)	18.4	17.1	16.7	15.5	14.4	13.0
총 사용량(실물량, 톤)	225.2	199.3	196.5	190	186	149
ha당 사용량(실물량, kg)	12.2	11.7	11.7	13.2	12.9	11.5
사용농약 품목수	136	128	140	121	125	114

농민들의 인권은, 유엔 인권선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초적 욕구(Basic Human Needs)>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함은 물론,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멧돼지는 보호받고 있어도, 멧돼지로 인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는 보상받고 있지 않는, 멧돼지보다도 못한 인권보장이 현실이다.

농민을 필두로 한 전 민중들은 이러한 현실을 혁파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1997년에 6,179회의 집회시위를 하였으나, 2001년에는 13,083회로 집회시위의 횟수가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1,837회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과거의 민란수준에 다다르고 있지만, 위정자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으며, 자기 배의 살찌우기에 급급하다. 지방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물론 지방 공무원들의 구속되는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청와대의 비서 보좌진들은 각종 이권사업 개입되어 중도에 물러난 사람이 점 점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들도 또한 그 탐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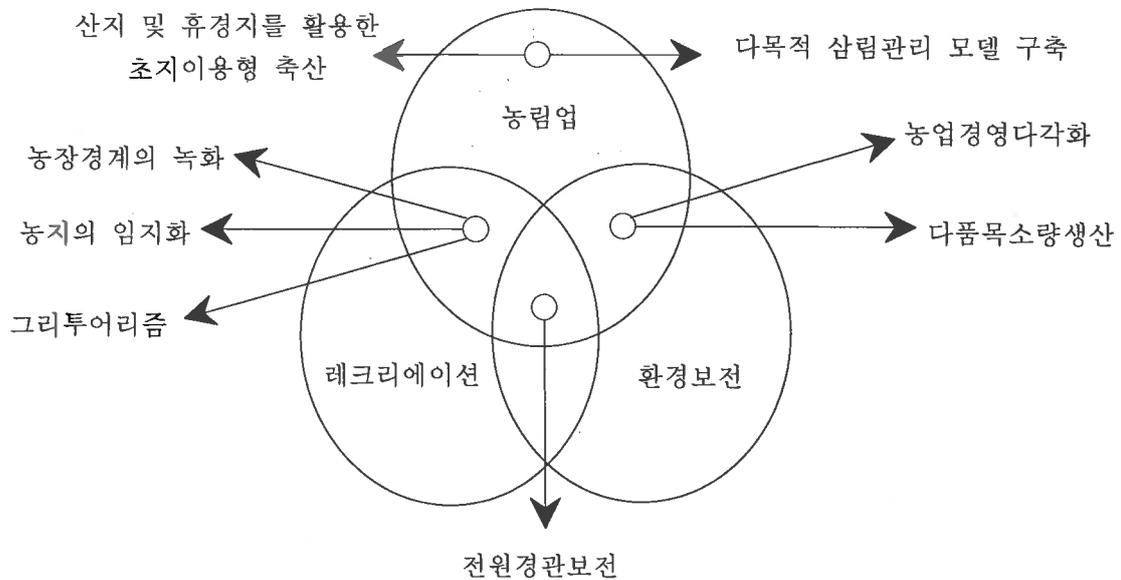
부패하고 탐학한 공직자들, 국민은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은 도덕성을 상실한 지도층들, 외공내응(外攻內應)하는 지식인들, 100여년 전 보다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한, 3가지 살리기 운동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있음을 천명하고 그에 따라 폐정개혁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 녹색혁명형 농업이 초래한 현실

「녹색혁명형 농업」은 다수확 품종을 토대로 한 농·축·수·임업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시스템이다. 농자재를 많이 투입하는 농법이고, 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농법이며, 에너지(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농법으로, 중(=기계)·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동물약품) 농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은 석유가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는 농업이며,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고투입 농업이다. 때문에, 석유가격이 높아지거나, 농산물의 채산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부채를 발생시킨다. 이 같은 농업은 4가지 격차와 4가지 종속을 발생시켜, 다수확 = 증산 = 생산량 증대가 되어도 식량자급율은 떨어지고, 농가는 도시로 이농하였다. 농촌지역의 생태계·환경도 파괴되었다.

4. 지역 내의 물질순환 · 지역자급 · 지역자립형 시스템의 확립

1) 경종+사료작물+축산+지역산 가공산업



— 「논 이용형 농업경영」 → 「자원관리형 지역농장제」 → 「산촌형 환경보전 농업모델 수립」 → 「산촌형 농업생태마을 조성」

— 논농사 + 맥류[귀리 또는 우리 밀, 보리 등 사료작물] + 축산[한우]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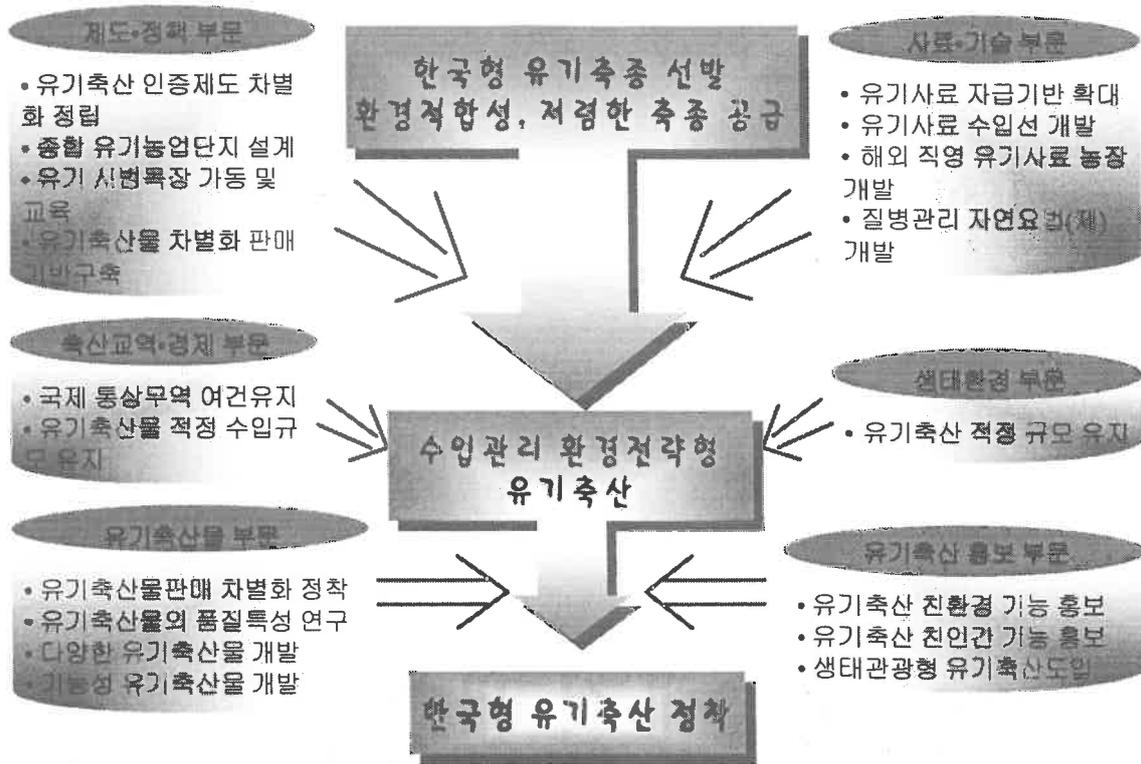
— 논 농업 집단화 필요 : 축산 사료 공급

→ 지역생산물 활용의 다양한 가공산업의 개발 : 지역 내 물질순환형 사회 System 발전

2) 농업경영과 생태물질순환, 탄소 순환의 조화

— 경종 · 축산의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등 환경보전형 지역농업 추진

<그림 1> 한국형 유기축산 모형의 구축



5. 농민 3권과 5대 주권의 보장

농민 3권과 5대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유지·보존권, 지역생태·환경·생명의 유지·보존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권>이라는 농민 3권과 <식량주권, 지역주권, 당사자 주권, 종자주권, 생명주권>이라는 5가지 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6. 지역등권(地域等權)의 실현

<생물다양성 보장되는 협동적 지역사회>와 <지역 내의 물질순환 체제·지역자급·지역자립형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국내외의 세력을 물리치고, <지역등권(地域等權)>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등권의 실현을 위하여, <1군 1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상원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권 영 근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 [발표 3]은 별도의 자료집 『2006 우금티선언 및 폐정개혁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폐정개혁안」 및
「2006 우금티선언」에
대한 해설

토론 1 - 어린이

양 은 희 / 생태유아공동체 상무

토론 2 - 여성농민

신 문 희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토론 3 - 종자

정 종 진 / 정농회 이사

토론 4 - 시민사회

윤 호 창 / 서울YMCA 간사

토론 5 - 생활협동조합

정 원 각 / 한국생협연구소 사무국장

한국생협연합회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1. 한국생협연합회 2007년 활동

내 용	일시/장소	참가자
한미FTA 농축수산물 대위 발족식	3월 9일 국회	회장님, 대외협력팀장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철회 기자회견	3월 17일 느티나무	강서, 일산, 구로, 안산 등 10여명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3월 20일 광화문	강서, 양천, 구로, 송파, 인천, 계양, 남 동연수, 부천, 부천시민, 김포, 일산, 덕 양, 안산, 광명 등 50여명
유통업체의 우리쌀 저가판매 저지를 위한 집회	3월 31일 서울역	회장님, 대외협력팀장
4월 유통업체의 수입쌀 공매 불참을 촉구하는 소비자 캠페인	4월 5일 전국	강서, 양천, 계양, 부천, 김포, 일산, 덕 양, 수원, 안산, 안양, 천안, 청주(2), 한 밭, 익산, 울산(2), 진주, 부산(2), 김해, 창원, 대구(4), 광주(3) 등
저질 급식재료 규탄과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4월 13일 여의도	급식위원장, 회장님, 식품위수도권분과 장, 대외협력팀장
5월 수입쌀 공매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소비자 캠페인	5월 10일 전국	강서, 양천, 구로, 인천, 계양, 남동연수, 부천, 부천시민, 일산, 고양녹색, 안산, 안양, 광명, 천안, 울산(2), 진주, 김해, 목포, 제주 등
한미FTA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5월 10일 명동성당	안산, 남동연수, 부천, 편집위원회, 급식 위원회 등 20여명

한미FTA소비자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6월5일 정동세실 레스토랑	안산, 서울, 회장님 등 6명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6월11일 대학로	식품위 중심으로 결합, 안양울목 방과후 아 이들의 노래공연
6월 음식점 쌀 원산지 표시를 촉구하는 소비자캠페인	6월 14일 전국	강서, 양천, 구로, 인천, 계양, 남동연수, 부 천, 부천시민, 김포, 일산, 고양녹색, 군포, 수원, 안산, 안양, 광명, 청주(2), 울산(2), 부 산(2), 김해, 광주(3), 전남동부(4), 제주
한미FTA공동학습회	6월 27일 배재학술센터	강서, 양천, 남동, 금천, 구로, 일산, 부천 시민, 광명, 안산, 서울, 한밭, 생협연구소, 연합회 직원 등 20여명
급식사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6월 27일 여의도	구로, 강서, 양천, 서울icoop,안산, 안양, 부천시민, 울산남부, 연합회 등 20여명
한미FTA 2차 협상 입장발표 기자회견	7월 6일 광화문	강서, 양천, 남동, 금천, 구로, 일산, 부천시 민, 안산, 수원, 김포, 덕양, 고양녹색부천, 안양, 연합회 직원 등 24여 명
7월 우리쌀밥 먹자 소비자캠페인	7월 12일 전국	천안, 전남동부, 울산, 한밭, 부산, 목포, 제주 등
한미FTA범국민대회	7월 12일 시청	부천, 부천시민, 안양, 구로시민, 서초, 남동연수, 연합회 직원 등 20여명
유기농업의날 선포식 기자회견	6월 2일 국회	연대회장님, 상무님, 도매시장 대표님
지구의 날 행사	4월22일 대학로	연합회 직원중심
환경영화제	5월 8~9일 서울시립박 물관	급식위원회 주관
광우병안전연대실무자회의		식품위 참가

2. 한국생협연합회가 논의 중인 중장기 과제

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Food System(식량체계)의 구축

생산자가 안전하게 생산한 농산물과 식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소비의 체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갖추어야 한다. 현재 세

계의 식량과 식품은 다국적 곡물기업과 식품기업에 의해 장악되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먹을거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농민들은 인간적인 삶을 위협받고 있다. 농산물이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수천 km를 이동하여 거래되면서 농민은 농토에서 쫓겨나가거나 임노동자로 전락하고 농산물은 대량생산을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로 범벅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는 몸에 독을 쌓는 결과를 가져오는 먹을거리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생협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수출 지향적인 세계 식량체계를 거부하고 가능한 자국 또는 지역에서 자급을 하는 지역식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생협연대가 2000년 들어서 꾸준히 진행해 온 전국 물류는 지역의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판로의 토대가 되었고 중부, 경남, 광주, 전남, 제주 등 지역 물류 센터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생협연대의 물류정책은 조합원이 늘어날수록 중장기적으로 지역물류센터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한다. 이를 위한 광역 물류망 구축

나. 친환경농업의 지속 발전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은 안전하지 못한 농산물만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농토와 수질 그리고 농민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농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또는 자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안정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홍성의 유기농 쌀이 남아서 소비운동을 하고 있다. 유기농 쌀의 소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조합원 증가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한 쌀을 소비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 쌀의 소비 정체는 경작지 감소로 이어지며 한번 경작을 포기한 농지를 회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경비와 노력이 들며 환경 훼손으로도 이어진다. 고투입농법(또는 관행농법)의 농지를 유기농 농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이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쌀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다. 사회적 경제(제3부문)의 확대

우리 사회는 현재 세금으로 사업하는 제1부문(공적 부문 public sector), 사적 자본의 영역인 제2부문(기업 부문 - private sector)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수축협이 있으나 사업은 제2섹터 방식으로 하고 결정적일 때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는 현실)그러나 일본, 미국은 물론 유럽은 NGO 또는 NPO같은 시민단체들이 협동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제3부문(the 3rd sector, social economy)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는 국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 교육, 지역재생 사업 등을 펼쳐 왔으나 이는 80년대를 경계로 재정과탄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새로운 복지 모델은 정부의 예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가 그동안 평가받지 못하고 배제되어 왔던 자원(하드, 소프트)을 부활시켜 자주적으로 복지, 고용, 지역 환경 보전과 같은 공동체사업(community business)를 펼치고 있다. 이 공동체사업은 협동조합운동과 결합하거나 협동조합운동의 흐름에서 발전, 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 경우는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을 비롯한 제3섹터가 social economy를 형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생활자의 자발성과 다양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 지역 생협의 과제라고도 하겠다.

라.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의미 있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판다!” 주식회사 특히 현대의 주주자본주의는 경영을 하여 이익이 남으면 주주에게 돌아간다. 심지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구조 조정하여 해고를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잉여가 생기면 다시 출자를 하여 일자리를 만든다. 특히 임노동의 일자리보다는, 노동과 소유가 같이 하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노동과 소유가 함께 한다는 것은 임노동에 의한 노동의 소외를 줄이고 보다 주인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리듬에 맞는 적절하고 의미 있는 노동(decent work)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직원생협, 노동자협동조합, Workers Collective와 같은 대안적인 일자리,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사업을 수백 가지 규모로 창출한다.

마. 신자유주의를 방어하는 현실적 대안 능력 확대 - 자본과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능력의 확대

생협의 올바른 먹을거리 운동은 생태, 환경, 생명의 보전에 대한 운동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본과 시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함께 한다. 아울러 비판에 머무는 운동을 뛰어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운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운동의 출발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대안을 갖지 못할 때에는 대중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하루 세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가 운동의 매개물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생협운동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만을 해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 제시의 운동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식품첨가물에서 황색3호가 사라지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 매장에서 생협은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적정화를 가져왔다. 즉, 생협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거래를 하여 유통 마진을 대폭 줄임으로써 폭리를 취해온 일부 기업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협운동의 대중화는 식품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생협이 전개하는 대안 제시 운동이 대중화에 성공하게 되면 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생협의 방침을 기준으로 노동과 자본 그리고 식품안전의 문제를 비교하게 되는 사회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유통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고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교 급식법에 의한 직영급식 실현은 생협 조합원이 앞장선 사회운동의 결과였다.

바. 생산과 소비의 상생

현대 자본주의와 시장에서는 상품을 생산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제로섬 게임을 하는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농산물에 대해 교역 대상이라는 상품의 개념이 도입되고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목표로 생산, 유통, 소비를 하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먹을거리에 대해 안전성이나 환경보전, 사회적 공익에 대한 기여보다 장기 보관과 먼 거리 유통 그리고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사고하게 되었고 생

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는 관계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협(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생산을 지향하는 윤리적 소비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은 생산자를 압박하여 이윤의 폭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생협은 생산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소비자는 생산하는 자의 수고를 이해하고' '생산자는 먹는 자의 입장에서 만드는' 생산소비유통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

사. 지역경제, 지방자치의 강화

자본주의의 시장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효율과 경쟁만이 강조되어 지역경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지역의 잉여가치가 서울, 수도권에 더욱 몰리는 편중을 가져온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나 공공재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협,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그것은 협동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의 소비와 경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므로 지역의 조합원의 확대 그리고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진다. 생협에서 추진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친환경우리농산물 소비를 위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생협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와 지방자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지역 생협의 조합원 규모가 이것을 뒷받침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협의 대중화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목표인 지역 생산 지역 소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

아.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

생협은 조합원 교육을 중시하여 꾸준히 교육활동을 펼치며 총회를 통해 1인 1표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실천한다. 시장은 독점이 심화될수록 대중의 참여는 막히고 민주주의 중요한 원칙인 선거, 선출에 있어서 평등권이 훼손된다. 주식, 자본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자본구성체(資本構成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협은 협동조합인 만큼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총회에서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갖는 인적구성체(人的構成體)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생협이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로치 데일 협동조합이 생긴 이후 1인 1표의 원칙을 지켜온 협동조합이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모든 지역에서 지켜온 것이며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정치 선거에 있어서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역사와 비교했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협동조합이 확대된 지역일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생협의 발전은 그와 비례하여 민주주의의 확산과 정착을 가져온다.

토론 6 - 환경운동

정 호 /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

토론 7 - 생산부문

오 상 근 / 청주한살림 상무

토론 8 - 로컬푸드

김 병 혁 / 대구경북 농업회생과지역자치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토론 9 - 현장농민

이 효 신 / 정읍농민회 농민

토론 10 - 생명·생태

수 지 행 / 생명평화결사 사무국장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내용	일시	장소	
설치미술전 및 실내전	12월 7일 (목) 2시	실외전 : 우금티 사적지 주변 - 충남민미협, 최평곤 실내전 : 공주문화원 전시실 - 김인규 (시멘트 밥), 여경섭 (농민일대기)	
1부 전야제	12월 8일 (금) 7-9시	국립공주박물관 강당	
2부 한마당	우금티 답사 심포지움 문화공연 유족의 밤 행사	12월 9일 (토) 1~4시 30분 5-6시	우금티 국립공주박물관 강당
		9-11시	공주유스호스텔 (탄천)
3부 기념제	제 112주년 기념식 거리행진 추모 제례의식 우금티 선언	12월 10일 (일) 10~11시 30분 12시 30분~2시 2~3시 4시 20분~	공주문예회관 대강당 연문광장~우금티 우금티 사적지

전야제 | 12월 8일 (국립공주박물관 강당)

- **사물놀이 공연**_ 금강풍물패
- **노래**_ 전교조충남지부여성위원회
공주생활소비자협동조합 (조개와 환경파수군의 1곡)
- **공주소리마당**_ 예인촌
- **우금티 소리** (운집가, 새야 새야 / 눈두렁 발두렁)
- **특별초청공연**_ 최선무용단
- **관객과 함께하는 마당**

한마당 | 12월 9일

- **우금티 답사**_ 유족회 (우금티 사적지 일대, 효포지역, 인안지역)
- **심포지움**_ 농업, 농촌, 농민, 지역, 생명, 환경을 생각하는 우금티 선언 (국립공주박물관)
- **문화공연**_ 극단 돌모루 '녹두장군 오셨네'(국립공주박물관)
- **유족의 밤** (공주유스호스텔 오후 9시)

동학농민혁명 112주년 기념식 | 12월 10일

- **기념식** (공주문예회관 대극장)
식전공연 : 창작무 (최선무용단), 국악연주 (공주시연정국악원)
- 기념식** (사회-김미화, 전병철)
- 국민의례
- 시 낭송 (전병철)
- 대화사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환영사 (이준원 공주시장)
- 축사 :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이원규 충청남도지사)
- 式後 공연** : 판소리, 김연 (전북도립국악원)
- **거리행진**
오전 12시 30분~오후 2시 (연문광장)
연문광장~우금티 (각종 단체, 시민학생 참여)
- **우금티 추모 제례 및 우금티 선언** (우금티 사적지)
한대수, 예술공장 두레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우금티 농민군 제례형식과 순서

이 땅의 전통 제사는 거의 유교식으로 지내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잘 못된 인습을 과감히 개혁하고자 하였듯이 제사의 본뜻을 살리고 참가자 모두가 참여 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 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중하고 장엄한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민족 전통제례 양식인 굿을 바탕으로 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제례를 도입 창작하여 지루하지 않고 흥미 있게 볼거리가 있도록 한다.

준비물

제례 음악음악도 전통과 창작을 섞어서 생음악과 녹음을 쓴다.
의상 유족들과 제사에 참여하는 단체대표들의 옷을 통일되게 입게 한다. (생활한복)
제물전국행사 성격상 이 제사에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지역의 범씨를 한 뒤씩 가져 오게 하여 제물로 받치고 지역 특산물과 하늘을 상징하는 물, 땅을 상징하는 흙 그리고 인간을 상징하는 오곡과 과일, 떡, 술을 제상에 올린다.

제례순서

1. 부정치기 신을 청하기 전에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 쑥불을 놓고 춤을 춘다.
2. 참신 천지신명을 먼저 배알한다. (춤)
3. 청신 천지신명과 농민군의 넋이 이 자리를 오시기를 청한다. (사나 문구낭송, 춤)
분풀이-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신을 청하는지에 대한 풀이를 한다. (연극형식)
4. 헌향 유족·동단협대표
5. 헌수 참가단체대표
6. 헌토 흙을 준비한 참가자
7. 헌곡 범씨를 준비한 참가자
8. 헌과 과일을 준비한 참가자
9. 유식 유족과 단체대표들이 제물을 올리고 울릴 때 집례자가 그 뜻을 낭송하며 지루하지 않게 춤을 춘다.
10. 사신 신을 보내는 의식 (씻김굿)
11. 음복 뒤풀이 (참가자 전원)

※ 전체 뒤풀이 전까지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한다.
▶ 제식상 제작 : 지택영 (전 공주농민회장)
▶ 제기 제작 : 김원희 (도자기공방 '흙내' 대표)

여기 사람들이 있다

● 권병철 (민중문화작가회의 시인)

하늘이 있다 땅이 있다
여기 사람들이 있다
뿌런 만큼 그만치도 거두지 못하는
땅, 그 썩어빠진
알아주기는키녕 눈길 하나 주지 않는
하늘, 그 만라비늘어진
그 그 세상 뒤집어버리고 때려부수려
조선날 골추 들고 고부에서 무장
밭났을 쉼지 않고 '백성은 하늘이다'
죽광 세워 백산 평토현에서 전주
너나 할 것 없이 '백성은 하늘이다'
삼자투면 어머라 살대에서 논산에서
부지깁이도 쫓아라 자주 평등 대등 세상
꿈터 하고개 우금티 송장매미 구석구석
쓰러지고 고꾸라지고 으개저도
마침내 '백성이 하늘이다' 솟구치던 갑오세
전라가 輔國하니 정상이 安民하고
강원은 輔國安民 萬혜는 除暴救民
남집이 弓弓하고 북적이 乙乙하니
충청은 弓弓乙乙 경기는 斥後斥洋
삼천리 사랑할방 후미진 기슭까지
아 짓들린 가슴 아아 짓밟히던 뱀판
맨뼘, 설움이관 설움 온갖 함성
죄다 봉화로 피어 '백성은 하늘이다'
운뎀, 고통이란 고통 온갖 짓발
모두 뺏탈로 살아 '백성은 하늘이다'
내가 뒤집지 못하던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뒤집어지던 또 다시 내가 태어나
끝끝내 '백성이 하늘이다' 내달리던 동학년
오늘도 고스란히 남아
되레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배부른 자 배만 더 채우고 마는
땅한, 이 땅한 늪의 세상
걸으려야 멀쩡한 것 같아도
뒤뉘린 하루하루 문드러진 갑상머리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 사람들이 있다 그저 하늘이 아니라
하늘 같은 하늘과 그냥 땅이 아니라
땅 같은 땅과 사람 같은 사람들이

